
정책참고자료

2017-17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국민안전처

정부, 7월 호우피해 복구비 2,876억 원 확정 - 재난 복구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가동 -	4
---	---

2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된다	8
--------------------------------	---

3 중소벤처기업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전통시장이 응원합니다 -경기장 인근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함께 하는 “팔도장터 명품관” 개설 -	10
--	----

4 교육부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발표	12
---------------------	----

5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의 생활 속 문제, 과학기술로 해결한다. -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 공청회」 개최 -	25
--	----

6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국민과 함께 문화정책 수립한다 - 권역별 ‘문화정책(聽策)포럼’ 개최 및 온라인 국민참여창구 개설 -	28
--	----

7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계란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17일 05시 기준 누계) - 1239 농가중 876농가 검사완료, 29농가 부적합 -	30
--	----

8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사전 실태점검 결과, 일부시설 수질기준 미달	32
---------------------------------------	----

- ◇ 본격적인 제도 시행 전 사전점검으로 철저한 시설관리 유도
- ◇ 8월부터는 수질기준 등 준수 의무화, 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예정

9 고용노동부

정부 예산·법령·정책은“일자리 중심”으로 설계·운영 -고용영향평가 강화·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방안 일자리촉 의결-	40
---	----

10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 ‘학교 밖 청소년 대학입시설명회’ 참가신청 8월 7일부터 온라인접수 -	52
--	----

11 국토교통부

괴산·함평·춘천·청주·대전 투자선도지구 5곳 지정 규제특례·재정지원 등 혜택...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기대	55
--	----

12 해양수산부

모든 해양레저스포츠가 여기에, 제1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막	61
-8.17~20 보령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려... 20만 해양레저스포츠인 참여-	

정부, 7월 호우피해 복구비 2,876억 원 확정

- 재난 복구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가동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소요비용 2,876억 원을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안전부 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 복구현황: 14개 시·도, 82개 시·군·구, 2,876억 원(사유시설 202, 공공시설 2,674)

- 복구비용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지원복구비 2,445억 원(국비 1,698, 지방비 747), 자체복구비 431억 원, 지역별로는 충북 1,754억 원, 충남 788억 원, 강원 230억 원, 경북 등 기타 11개 시·도 104억 원이다.

- 시설별로는 주택,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202억 원, 하천 및 도로 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에 2,674억 원(국고추가지원 포함*)을 결정하였다.

* 특별재난지역 국고 추가 지원액: 449억 원(청주 209, 천안 180, 괴산 60)

- 이번 결정으로 심각한 호우 피해를 받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강원 홍천 등 7개 지자체는 시설 복구에 1,67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행안부는 7월 호우피해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특별재난지역 등의 재난 복구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17일 개최한다.

< 협의체(TF) 구성·운영 개요 >

- ◆ (구 성) 단장(재난관리실장),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지자체 합동 3개 실무반(기획총괄, 재난보험, 재난지원)으로 구분 편성, 필요시 자문위원회 별도 운영
- ◆ (운 영) 전체회의는 주 2회 개최, 필요시 팀별 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 수시개최
- ◆ (역 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적정성,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현실화, 재난보험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협의, 대안 마련

○ 협의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일부 읍·면·동의 경우 피해는 심하나 피해액이 선포기준에 미달하여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점에 대한 개선책
- 둘째, 소상공인 점포와 공동주택 지하 침수 등에 대한 지원 및 '06년 이후부터 동결된 항목*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현실화 방안
 - * 주택전파 9백만 원, 침수 1백만 원, 농약대 500천 원/ha(채소류), 대파대 1,500천 원/ha(무,배추) 등
- 셋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상품 및 생계형 건설기계 침수 피해에 적용될 수 있는 침수 재해 특약보험 개발과 같은 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등

○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 지원되는 일부 간접지원 항목*을 특별재난지역과 무관하게 재난 지역 피해주민에게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 요금 감면, 병력동원훈련 면제 등

□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소상공인 점포 및 공동주택 지하 침수 피해, 농작물 피해 등의 지원 단가 현실화, 보험제도 활성화 등 사회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 라고 밝혔다.

7월(7.2~11, 7.14~16)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 현황임

□ **그간 추진사항**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피해조사 : 7.17~20, 7.22~28
* 국고지원 지역 : 강원(홍천), 충북(청주, 괴산, 증평, 보은, 진천), 충남(천안)
- 특별재난지역 선포(청주, 괴산, 천안) : 7.27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 : 7.31~8.10
-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확정 : 8.16

□ **피해현황: 사망 6명, 피해액 872억 원** (7.2~11: 88억 원, 7.14~16: 784억 원)

- 사유시설: 188억 원(충북 132, 충남 23, 강원 27, 경기 등 6)
- 공공시설: 684억 원(충북 415, 충남 212, 강원 43, 경기 등 14)
* 시·도별: 충북 547, 충남 234, 강원 71, 경북 8, 경기 등 12

□ **복구계획: 총 2,876억 원** (7.2~11: 301억 원, 7.14~16: 2,575억 원)

- 재원별: 국비지원 복구 2,876억 원(국비 1,698, 지방 747), 자체복구 431억 원
- 시도별: 충북 1,754, 충남 788, 강원 230, 경북 54, 서울 23, 경기 등 27
- 시설별 재원

(단위 : 억 원)

구 분	합 계	국비지원 복구			자체복구
		소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2,876	2,445	1,698	747	431
국고추가지원			449	-449	
사 유 시 설	202	202	132	70	-
공 공 시 설	2,674	2,243	1,117	1,126	431

* 국고추가지원액 : 449억(청주 209, 괴산 60, 천안 180)

□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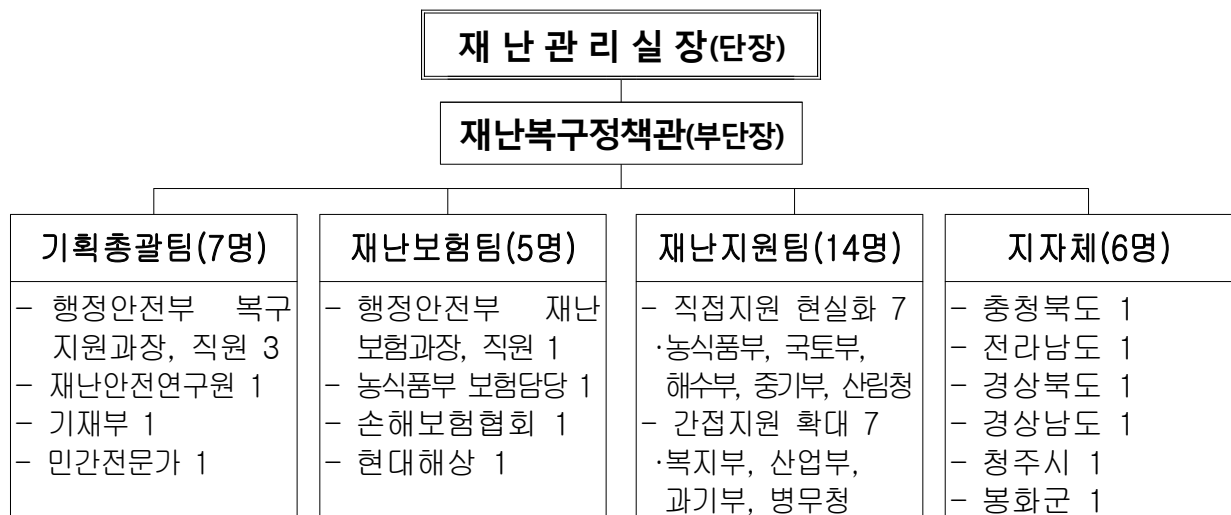
- 올해 내 설계 발주 등 재해복구사업 조기착수 추진(8월~)

□ **기본방침**

- 현행 제도 및 관행 등 대국민 입장에서 재조명토록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 일선 실무행정 적용을 위한 지자체 방재실무 공무원 공동 참여
- 관계부처 공무원, 관련 학회, 민간단체 등 이견부분 사전 해소
- 대국민 공감대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한 공청회 등 개최 및 참여 기회 제공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재난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재난복구정책관(부단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원,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및 지자체 국·과장급 공무원 30명 내외로 구성
 - 분야별 3개 실무팀(기획총괄, 재난보험, 재난지원)으로 구분·편성
 - 지자체는 각 분야에 참여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 건의
- * 재정, 보험, 제도 분야별, **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산림청 등



- **(운영)** `17. 8월 ~ 각 팀별 임무완료시 까지(`17년. 9월말 목표)
 - 전체회의는 주 2회 개최, 필요시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회의 수시개최
 - * (필요시)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 부처간 이견조정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 별도 운영
- **(역할)** 특별재난지역 등 재난 복구 지원체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안 마련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된다

국민권익위,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주거환경
개선토록 국토부에 권고

-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 법인운영 공동생활가정과 동일하게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입소자(아동, 장애인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개인운영 공동 생활가정 입소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 공동생활가정의 구분

- 개인운영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소규모 주거시설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
- 법인운영 시설은 개인이 아닌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임

- 국토교통부의 ‘2017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지침’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이 법인운영 보장시설의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운영 보장시설 수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인 시설 입소자의 주거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일선 지자체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해 민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17.2월)

- ○○도 △△시의 경우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이 정부지원을 일부 받는다는 이유로 지원수준에 대한 검토 없이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지급한 주거급여 약 7백만 원을 환수
- ○○광역시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187명에게 대해 ○구는 주거급여를 지급한 반면, △구, ○구는 주거급여 미지급(720명)

또 법인운영 시설과는 달리 개인운영 시설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이 없어 임대료가 비싼 민간주택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임차료 부담으로 시설을 자주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법인 및 개인시설 임대료 비교(국민권익위 실태조사, '17.2월)

- (법인) ○○ 공동생활가정은 매입임대주택 70.43㎡(방3개)를 임대하여 보증금 5,710,000원, 임대료 월 138,450원을 부담하는 반면
- (개인) ○○ 공동생활가정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하여 민간임대주택 85.8㎡(방3개)를 임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임대료 월 700,000원을 부담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관련 지침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히, '법인운영 보장 시설 수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개인운영 시설에 장기간 거주하는 입소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운영 시설도 법인운영 시설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을 주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입소자들의 주거여건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전통시장이 응원합니다

- 경기장 인근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함께 하는 "팔도장터 명품관" 개설 -

- 중소기업부(차관 최수규)와 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소기업부와 강원도가 손잡고 우수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외국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 * 개최장소 : 평창 (설상, 슬라이딩경기), 강릉 (빙상경기), 정선 (알파인경기)
- * 참가규모 : 80여 개국 선수·임원, IOC패밀리, 보도진 등 2.6만명
- * 올림픽 경기를 계기로 39만명의 외국인 방한 예상(1조 2,543억원 소비지출효과 예상)

- 동계올림픽 기간 중 외국 관광객에게 전통시장의 고유한 매력과 한국적인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 ① 경기장 인근(평창, 강릉)에 전국 우수시장의 대표상품과 특화먹거리, 전통문화 체험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8도장터 명품관"을 개설하고,
 - "2018 푸드트럭(카트) 쇼"도 개최하여 전국의 푸드트럭(카트)들을 한자리에 모아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 관광객에게 청년상인들의 아이디어 상품과 핑거푸드, 퓨전먹거리 등도 선보일 예정(조명을 활용한 야시장 개설 등)

② 이와 함께, 외국 관광객 이동경로에 따라 올림픽 거점시장 및 배후시장을 선정하여

* 거점시장 : 올림픽 개최지(평창, 강릉, 정선)에 위치한 대표시장 3곳

* 배후시장 : 서울, 인천, 경기 등 선수단·관광객 이동경로에 위치한 대표시장(10곳 내외)

○ 외국어 안내·편의시설 및 대표상품 포장디자인 개선, 시장별 특화된 문화·체험컨텐츠 개발 등 다양한 외국인 방문프로그램을 준비하고,

○ 인근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외국인 전용 투어버스 운영 및 시장투어, 통역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도 배치

③ 또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및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올림픽 홍보 서포터즈를 선발(20명 내외)하여 행사 기획단계에서부터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문프로그램 예약 등 사전정보를 제공할 계획

□ 중기부 최수규 차관은, “금번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만큼, 내실있고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선수단 및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만의 멋과 맛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며,

* 동계올림픽 추경예산 : 8도장터 명품관, 거점 및 배후시장 지원 등 38억원

○ “이를 통해 외국관광객의 전통시장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 효과가 서민경제로 파급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발표

❖ 시안 주요 내용

- ① 2015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통합사회·통합과학' 신설
- ② 탐구영역 선택과목 수 축소 : 최대 2과목 → 1과목
- ③ 수능 출제범위 : 2015 교육과정상 공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
- ④ 직업탐구영역 : '성공적인 직업생활' 1과목 통합 출제
- ⑤ 제2외국어/한문 : 절대평가 적용
- ⑥ 절대평가 과목 확대
 - [1안] 일부 과목 절대평가 : 7과목 중 4과목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 [2안] 전 과목 절대평가 : 7과목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선택, 제2외국어/한문)
- ⑦ 수능-EBS 연계 개선방향
 - [1안] 연계를 축소·폐지 / [2안] 연계를 유지, 연계방식 개선

❖ 향후 일정 : 4차례 권역별 공청회, 8.31.[목] 확정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7. 8. 10.(목) 10:30, 정부세종청사 제4공용브리핑룸에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2020년 말에 응시하게 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수능시험 개편은 문·이과 구분 없이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소양을 지닌 융·복합 인재를 길러내고자 '15년 9월에 확정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6년 3월부터 교육과정 전문가, 평가 전문가, 현장 교원 등으로 수능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능 과목 및 평가체제 등을 연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안을 마련하였다.

* 위원장 : 김성열 경남대 교수(교육학과, 전 교육과정평가원장, 한국교육학회 수석부회장)

□ 2021학년도 수능의 개편 방향은,

-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을 반영하여 기초 소양 함양과 더불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과 선택과목을 활성화하며,
- 둘째, 고등학교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수능 과목과 점수체제, 평가방식을 마련하고,
-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수능 준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 위 개편 방향에 맞춰 마련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은 다음과 같다.

(1)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과목 조정

□ 2021학년도 수능부터 시험과목으로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신설한다.

- 이는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분야의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신설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 대신, 사회탐구/과학탐구와 같은 선택과목은 기존에 최대 2개 과목 선택에서 1개 과목 선택으로 줄일 계획이다.

- 따라서 학생들은 현재와 동일하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선택 1과목(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최대 7과목까지 수능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 기본적으로 수능 출제범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상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으로 한다.

- 국어, 수학, 영어, 선택, 제2외국어/한문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고 1~3)에서 출제하며,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은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는 공통과목이라는 교육과정의 특성상 고 1 수준으로 출제한다.

- 한국사는 현행 수능과 마찬가지로 응시 필수과목으로 미응시할 경우 성적표가 제공되지 않으며, 다른 과목들은 자유롭게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과목별 구체적인 출제범위, 문항 수, 배점, 시험시간 등은 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후속연구를 통해 2018년 2월 말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2] 세부 과목 개편

- 수학 영역은 현재와 같이 ‘가형/나형’으로 분리 출제함으로써 소질과 적성, 희망 진학계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문·이과 구분 없는 융·복합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수학을 통합 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 진학하고자 하는 분야의 학습 요구도에 따라 응시가 가능하도록 수학을 분리 출제하는 것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수능 출제범위를 2015 개정 교육과정상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으로 함에 따라, 과학탐구 영역에서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와 같은 과학Ⅱ 과목은 수능 출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Ⅱ는 학생의 진로를 위해 교과 융합, 심화 수업 등을 하도록 설계된 진로선택과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 이러한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과학Ⅱ 과목을 수능 출제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학교 수업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 직업탐구 영역은 일반고와 특성화고 간 교육과정 차이를 고려하여 유지하되, 기존 10과목에서 1과목으로 통합 출제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의 진학률이 감소하면서 매년 직업탐구 영역 응시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나, 일반고와 특성화고 간 교육과정 차이를 고려하여 직업탐구 영역은 유지할 계획이다.

* 응시규모 : ('15학년도) 13,100명 → ('16학년도) 7,512명 → ('17학년도) 6,273명

- 대신, 출제과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반영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신설된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라는 전문공통과목 1과목으로 통합 출제하기로 하였다.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세계화·다문화 시대에 제2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지하되,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이로써 그동안 제2외국어 학습을 충분히 하지 않은 학생들이 상대평가에서 높은 상대등급을 받기 위해 아랍어 등으로 몰리는 왜곡된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수능 절대평가

□ 그동안 교육부는 학생 간 무한 경쟁과 과도한 시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에,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에 절대평가 체제를 적용해 왔다.

□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는 절대평가 적용 과목을 일부 과목 또는 전 과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1안은 통합사회·통합과학과 제2외국어/한문 과목까지 4개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방안이며, 2안은 7개 과목 모두를 절대평가하는 방안이다.

□ 그간 시안 마련을 위한 교사, 학부모, 입시전문가, 대학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 대체로 수능 절대평가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

감하였으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대입 안정성 차원에서 신중한 입장이 다수였다.

- 아울러, 그 동안 수능개선위원회의 연구 및 교육주체별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한 각 안별 기대효과 및 현장의 우려는 다음과 같다.

	<제1안> 일부과목 절대평가	<제2안> 전과목 절대평가
기대 효과	▶ 수능체제 변화 최소화로 대입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우위 ▶ 수능 변별력 유지로 학생부 미흡·부재 학생 재도전 기회 확보 (재수생, 검정고시 등) ▶ 기존 수능과 유사하여 고교에서 학생 진로 지도에 용이 ▶ 수능 변별력 유지로 대학에서 학생 선발 상대적 용이	▶ 수능 부담 경감으로 학생 희망·진로별 학습 집중 기대 ▶ 수능 영향력 축소로 학생 참여 수업, 과정중심평가 활성화 기대 - 상대평가 과목 쏠림학습 해소
현장의 우려	▶ 암기식 문제풀이 등 현행 교육 문제 해소에 한계 - 학생의 학습부담 상대적 과중 ▶ 상대평가 과목 쏠림 학습으로 다양한 수업 혁신에 한계 ▶ 계속적 대입전형 개편 등 혼란 및 사회적 갈등	▶ 수능 변별력 약화에 따른 학생부 미흡·부재 학생 재도전 기회 축소 (재수생, 검정고시 등) ▶ 학생부전형 확대에 인한 내신 부담 및 공정성 문제 제기 - 학생부 및 내신 경쟁 과열 ▶ 변별을 위한 타 전형요소 확대에 사교육 부담 확대 우려 ▶ 대입전형체계의 전반적 변화를 수반하므로 대입 안정성 저하

- 수능 절대평가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권역별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4] 수능 EBS 연계 개선

- 그동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수능-EBS 70% 연계를 추진해 왔으나, 교과서 대신 EBS 교재 문제풀이 수업, 영어지문 해석본 암기 등 학교 현장의 교육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에 따라 수능-EBS 연계 개선방향에 대해, 수능 EBS 연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거나, 연계율은 유지하되 연계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수능 EBS 연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 각 안별 기대효과 및 현장의 우려는 다음과 같다.

	<제1안> 연계율 축소·폐지	<제2안> 연계율 유지, 방식 개선
기대 효과	▶ EBS 한글 지문 해석본 암기 등 학교 교육 왜곡 해소 기대	▶ 연계율 유지 등 학생·학부모의 불안감 해소
현장의 우려	▶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수능 대비 곤란 호소 및 사교육비 증가 우려 ▶ EBS 교재 외의 다른 문제집까지 공부해야 하는 학습 부담	▶ 연계율 축소·폐지보다 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 정도 미흡 ▶ 간접연계율 확대 시 학생들의 EBS 연계 체감 저하

- 교육부는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해 향후 4차례에 걸친 대규모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학생, 학부모, 학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 8. 31.(목)에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권역	일시	장소
서울·경기·인천·강원	8. 11.(금) 16:00~18:00	서울교대(종합문화관)
광주·전남·전북·제주	8. 16.(수) 16:00~18:00	전남대(대학본부 용봉홀)
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	8. 18.(금) 16:00~18:00	부경대(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
대전·세종·충남·충북	8. 21.(월) 16:00~18:00	충남대(정심문화회관 백마홀)

2018 수능(현행)			<제1안> 일부과목 절대평가	<제2안> 전과목 절대평가
1	국어		1 국어	국어
2	수학 가/나형 중 택1		2 수학* 가/나형 중 택 1	수학* 가/나형 중 택 1
3	영어		3 영어	영어
4	한국사		4 한국사	한국사
	-		5 통합사회·통합과학	통합사회·통합과학
5	탐구 (택 1)	사회탐구 9과목 중 최대 택2	6 탐구 (택 1)	사회탐구 9과목 중 택 1
6		과학탐구 8과목 중 최대 택2		탐구 (택 1)
		직업탐구 10과목 중 최대 택2		과학탐구** 4과목 중 택 1
7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 택 1		7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 택 1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 택 1

* 수학은 응시자 소질·적성·희망 진학 계열 등에 따라 출제유형 선택 응시

** 2015 교육과정상 진로선택과목으로 구성된 과학II(물·화·생·지II)는 출제 범위에서 제외

*** 2015 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된 전문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으로 통합 출제

- 1) 표시된 과목은 절대평가 적용
- 2)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현행과 유사한 수준에서 출제(고1~3)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은 고1 수준에서 출제 (한국사는 응시 필수, 그 외 응시 자율)
- 3) 과목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시험시간 등은 후속연구를 통해 '18. 2월말까지 확정
- 4) 수능-EBS 연계율은 1안) 연계율 축소·폐지, 2안) 연계율 유지하되 연계방식 개선

☐ **보통교과**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초	국어	국어(8)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8)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8)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I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6)		
탐구	사회(역사/ 도덕포함)	통합사회(8)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I,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예술	체육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 재산 일반
	제2외국어		독일어 I 일본어 I 프랑스어 I 러시아어 I 스페인어 I 아랍어 I 중국어 I 베트남어 I	독일어 II 일본어 II 프랑스어 II 러시아어 II 스페인어 II 아랍어 II 중국어 II 베트남어 II
	한문		한문 I	한문 II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 공통과목 옆 ()는 단위 수,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의미

- (통합사회) 학생들이 삶 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를 선정하고, 각각의 주제에 대해 시간적·공간적, 사회적·윤리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사고할 수 있도록 개발한 과목
- (통합과학) 자연현상에 대한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통합을 통해 융복합적 사고력 신장이 가능하도록 구성

과목	영역	핵심개념	주요 내용
통합 사회	삶의 이해와 환경	행복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자연환경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공간	생활공간과 사회
	인간과 공동체	인권	인권보장과 헌법
		시장	시장경제와 금융
		정의	정의와 사회 불평등
	사회 변화와 공존	문화	문화와 다양성
		세계화	세계화와 평화
		지속가능한 삶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통합 과학	물질과 규칙성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원소 기원, 주기율, 화학결합
		자연의 구성 물질	자연구성물질, 신소재, 전자기
	시스템과 상호작용	역학적 시스템	중력, 자유낙하, 운동량
		지구 시스템	에너지 물질 순환 등
		생명 시스템	세포, 물질대사, 효소, DNA
	변화와 다양성	화학변화	산화·환원, 산·염기, 중화
		생물 다양성과 유지	지질시대, 진화와 생물다양성
	환경과 에너지	생태계와 환경	생태계, 에너지 효율적 활용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전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 전문교과Ⅱ (일부 발체)

교과(군)	과목군			기준 학과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음식 조리	성공적인 직업생활	식품과 영양 급식 관리	한국 조리 중식 조리 소믈리에 바텐더	조리·식음료과
기계		기계 제도 기계 기초 공작 전자 기계 이론 기계 일반 자동차 일반 냉동 공조 일반 유체 기계 자동차 기관 자동차 배기 자동차 전기·전자 제어 선체 도면 독도와 제도 선박 이론 선박 구조 선박 건조 항공기 일반 항공기 실무 기초	기계요소 설계 선반 가공 연삭 가공 측정 방전 가공 위터제트 가공 사출 금형 설계 사출 금형 품질 관리 프레스 금형 설계 프레스 금형 품질 관리 기계 수동 조립 건설 광산 기계 설치·정비 공작 기계 설치·정비 농업용 기계 설치·정비 냉동 공조 설계 냉동 공조 유지·보수 관리 자동차 전기·전자 장치 정비 자동차 엔진 정비 자동차 차체 정비 자동차 정비 검사 선체 조립 선체 품질 관리 전장 생산 선실 의장 생산 항공기 기체 제작 항공기 전기·전자 장비 제작 항공기 가스 터빈 엔진 정비 항공기 프로펠러 정비 항공기 전기·전자 장비 정비 항공기 정비 관리	기계 제어 설계 밀링 가공 컴퓨터 활용 생산 성형 가공 레이저 가공 플라스마 가공 사출 금형 제작 사출 금형 조립 프레스 금형 제작 프레스 금형 조립 운반 하역 기계 설치·정비 섬유 기계 설치·정비 고무 플라스틱 기계 설치·정비 승강기 설치·정비 냉동 공조 설치 자동차 정비 자동차 도장 선체 가공 선박 도장 기장 생산 선장 생산 선체 생산 설계 항공기 엔진·프로펠러 제작 항공기 기체 정비 항공기 왕복 엔진 정비 항공기 계통 정비 헬리콥터 정비
		...후략...		

- (성공적인 직업생활) 학생이 미래의 직업생활에서 요구하는 실천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성공적인 직업인이 되기 위해 재학 중에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 과목

* 직업기초능력, 일과 산업의 이해, 취업과 창업, 산업 안전, 근로관계, 직업 윤리 등

< 성공적인 직업생활 내용 >

내용 영역	내용 영역 요소
일과 직업생활	• 일과 직업의 가치, • 직업생활의 의미, • 생애 발달과 직업적 성공
기업과 산업 활동	• 기업과 기업 활동, • 제조업과 제품 생산 활동, • 서비스업과 서비스 생산
직업 능력 개발과 평생 학습	• 직업기초능력의 종류와 향상, • 전공별 직무 수행 능력 탐색, • 경력 개발과 평생 학습의 의미
취업과 창업	•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취업, • 취업 계획 수립과 구직 활동, • 창업과 기업가 정신
근로관계와 산업 안전	• 근로관계와 법, • 고용 서비스와 사회 제도, • 산업 안전과 재해 예방, • 협력적인 노사 관계
직업윤리와 직업사회	• 사회 문제와 직업윤리, • 미래의 직업 사회

붙임3

2018학년도 수능 시간표 및 출제범위

영역	구분	문항 수	문항 유형	배점		시험 시간	출제 범위(선택 과목)
				문항	전체		
국어		45	5지선다형	2,3	100점	80분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수학 (택 1)	가형	30	1~21번 5지선다형, 22~30번 단답형	2,3,4	100점	100분	미적분 II,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나형						수학 II,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영어		45	5지선다형 (듣기17문항)	2,3	100점	70분	영어 I, 영어 II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한국사 (필수)		20	5지선다형	2,3	50점	30분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
탐구 (택 1)	사회 탐구	과 목 당 20	5지선다형	2,3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최대 60분)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9개 과목 중 최대 택 2
	과학 탐구	과 목 당 20	5지선다형	2,3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최대 60분)	물리 I, 화학 I, 생명 과학 I, 지구 과학 I, 물리 II, 화학 II, 생명 과학 II, 지구 과학 II 8개 과목 중 최대 택 2
	직업 탐구	과 목 당 20	5지선다형	2,3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최대 60분)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10개 과목 중 최대 택 2
제2외국어/ 한문		과 목 당 30	5지선다형	1,2	과목당 50점	과목당 40분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베트남어 I, 한문 I 9개 과목 중 택 1

※ 표시된 과목은 절대평가 적용

교육과정 개정	수능 개편
6차 교육과정 개정 ▪ 1992년 개정, 1996년 고 1 적용 ▪ 필수과목 · 선택과목 도입	1999학년도 수능 개편 ▪ 탐구영역 선택과목제 도입 ▪ 선택과목간 유·불리 방지를 위해 표준점수체제 도입
7차 교육과정 개정 ▪ 1997년 개정, 2002년 고 1 적용 ▪ 국민공통기본과정 이외에 모두 선택	2005학년도 수능 개편 ▪ 모든 시험영역 및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수능 도입 ▪ 전문계열 학생을 위한 직업탐구영역 신설
수학과 교육과정 개편 ▪ 2007년 개정, 2009년 고 1 적용	2012학년도 수능 개편 ▪ 수리영역(가형 · 나형) 출제과목 조정
2009 개정 교육과정 도입 ▪ 2009년 개정, 2011년 고 1 적용 ▪ 교과영역 구분, 교과목 조정	2014학년도 수능 개편 ▪ 국어·수학·영어 수준별 수능 도입 (A/B형) ▪ 탐구영역 최대 선택과목 수 조정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 ▪ 2015년 개정, 2018년 고 1 적용 ▪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 도입 ▪ 통합사회, 통합과학 신설	※ 2021학년도 수능 개편 필요

국민의 생활 속 문제, 과학기술로 해결한다.

-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 공청회」 개최 -

- 얼마 전 일명 ‘햄버거병(용혈성 요독 증후군)’ 사태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햄버거 포비아가 확산됐고 관련업계는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또한 최근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독감은 올해에도 발병하여 달걀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렸다.
- 이와 같이 국민들의 일상을 불안하게 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기술이 본격적으로 나선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3일(목) 오후 3시 서울시청에 위치한 시민청 태평홀에서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경제 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최고의 가치로 지향해 왔으나, 근래에 들어 과학기술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국민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혁신에 기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에, 국민의 생활 속 다양한 문제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방식을 제안하고, 연구개발 과정에 국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토록 하는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이 마련되었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일반국민 및 시민단체, 산·학·연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석하여,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배태민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 이화여대 안과학 김윤택 교수가 경험담을 토대로 “사례로 보는

국민생활연구”를 소개하고, ▲과기정통부 강영일 국민생활연구팀장이 이번 공청회의 주제인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을 발표한다.

- 주제 발표 후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위진 사회기술혁신연구단장을 좌장으로, 미세먼지국가전략프로젝트 배귀남 단장,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최현석 단장, 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연구소 김은영 팀장, 서울신문 유용하 차장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 정부는 향후 국민생활연구를 통해 과학기술로 국민생활문제해결,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배태민 거대공공정책연구관은 “그동안 학문적 기반을 공고히 하거나 경제적 가치 창출에 주력해 온 과학기술의 지평을 사회적 가치실현으로 확장해 가겠다.”며, “국민생활 속 문제해결에 핵심가치를 두고 연구개발(R&D)체계를 혁신해 가고, 전문가의 영역로만 여겨졌던 과학기술연구에 국민의 목소리와 참여를 더 담아내겠다.”라고 말했다.
-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8월 중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붙임】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 공청회」 개요

□ 개최 개요

- (일시) '17. 8. 3.(목) 15:00~17:10
- (장소) 시민청 태평홀(서울시청 지하2층)
-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참석 대상) 일반국민, 시민사회 단체, 산·학·연 전문가

□ 행사 식순

시 간	주요내용
15:00~15:05 (05')	■ 인사말씀 - 배태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15:05~15:20 (15')	■ 발표 I 『사례로 보는 국민생활연구』 - 김윤택 (이화여대 안과학 교수)
15:20~15:40 (20')	■ 발표 II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 - 강영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생활연구팀장)
15:40~16:40 (60')	■ 패널토론 [좌장] -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기술혁신연구단장) [토론] - 배귀남 (미세먼지국가전략프로젝트단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최현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청정생산시스템전략기획단장) - 김은영 (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연구소 팀장) -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 유용하 (서울신문 차장)
16:40~17:10 (30')	■ 질의응답 및 종합정리

문체부, 국민과 함께 문화정책 수립한다

- 권역별 '문화청책(聽策)포럼' 개최 및 온라인 국민참여창구 개설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8월 3일(목)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된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청책(聽策) 포럼'에 참석해 현장 문화예술인, 일반 국민 등의 문화정책 제안을 경청했다. 이번 포럼은 다양한 연령대의 현장 문화활동가, 예술인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존의 경직된 형태의 토론회가 아닌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원탁회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권역별 '문화청책포럼' 진행

도종환 장관은 “문화정책의 주인은 국민이며, 문화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문화청책 포럼’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역별 포럼은 지역의 공공기관과 단체 등과 협력해 진행되며, 논의주제 선정부터 참여자 모집, 포럼 운영까지 지역이 중심이 되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 포럼에서 수립된 문화정책 제안사항은 연말 ‘결과포럼’을 통해 국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국민 참여 문화정책 제안’ 온라인 창구 8월 3일부터 3달간 운영

이와 더불어 문체부는 온라인에서도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문체부 전 영역에 대한 문화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문체부 대표 누리집*에 ‘국민 참여 문화정책 제안’ 창구를 개설한다. 국민 누구나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책 제안에 참여하려면 문체부 대표 누리집 시작화면의 ‘국민 참여 문화정책 제안’에 접속하면 된다. 온라인 창구는 8월 3일(목)부터 3달간 운영되며 제안된 정책 제안은 분야별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향후 문화정책 수립 시 활용될 예정이다.

* 문체부 대표 누리집: 컴퓨터(www.mcst.go.kr), 모바일(m.mcst.go.kr/m)

도종환 장관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문화예술, 체육, 관광, 콘텐츠 등 문체부 전 영역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국내 계란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17일 05시 기준 누계) - 1239 농가중 876농가 검사완료, 29농가 부적합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관련, 8.17일 05시 기준, 검사대상 1,239개 농가 중 876개 농가의 검사를 완료했으며, 29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 적합판정을 받은 847개 농가는 전체 계란공급물량의 86.5%에 해당되며, 시중 유통을 허용하였다.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신규 23개 농가 포함 총 29개 농가(유통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2건 포함)이며, 해당 농가 물량은 전량 회수 폐기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 8.17일 05시까지 부적합 29개 농가 중 피프로닐(7농가), 비펜트린 등 기타 농약 기준초과 등 22농가

<표> 성분별 부적합 현황(8.17. 05시 기준)

구분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등 기타	계
건수	7	19	3	29

* 플루페녹수론(2건) 및 에톡사졸(1) 불검출 기준

- 검사완료 농가(876)중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미흡한 농가는 총 60농가이며, 부적합 농가는 25농가이며, 친환경

인증 기준만 위배한 농가는 35농가이다.

- 부적합 판정을 받은 25개 농가의 계란은 회수 폐기 조치 중이다.

- 일반 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되어 친환경 기준만 위배한 35개 농가는 친환경 인증표시 제거 등을 통해 일반 제품으로 유통 가능하다.

- 식약처는 전국의 대형마트,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 판매 중인 계란 162건(8.15일 대비 57건 증)을 수거하여 검사 중이며, 검사를 완료한 113건(8.16, 21시 기준) 중 기 발표한 2건외에 추가적인 부적합은 없었다.

- * 8.16일 21시 기준, 162건 중 검사를 완료한 113건 중 111건이 적합 판정되었고, 2건(신선대란 홈플러스, 부자특란)이 부적합(비펜트린)한 것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은 회수, 폐기 조치 중이며, 나머지 49건은 검사 중임

-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기관은 금일(17일) 05시 기준 산란계 농장 전수 조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847농가의 공급물량(86.5%)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하였고, 금일중에 전수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 식약처에서 추진중인 유통단계 계란 수거·검사는 8.18일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사전 실태점검 결과, 일부시설 수질기준 미달

◇ 본격적인 제도 시행 전 사전점검으로 철저한 시설관리 유도

◇ 8월부터는 수질기준 등 준수 의무화, 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예정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국 시·도 지자체와 함께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번 실태점검은 본격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적용* 시점(7월 28일) 전에 환경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과 시·도 지자체가 합동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가동 여부, 수질 및 관리 기준 만족 여부 등에 대해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점검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제68조 등 신설 시행('17.1.28.)

* 법제화 이전 설치·운영된 시설은 시행일('17.1.28.)로부터 6개월간 신고 유예

□ 실태점검 결과,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 등의 항목은 대부분 수질 기준을 만족했으나, 18곳이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유리잔류염소는 올해 신설되어 강화된 수질기준 항목으로, 기준에 미달한 18곳은 염소투입량 조절 미숙 등으로 기준치 농도 (0.4~4.0mg/L) 보다 낮게 관리되고 있었다.

○ 이들 시설은 개방이 중지됐으며, 저류조 청소 및 용수교체, 적정량 염소투입 등의 조치가 완료된 후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재개방됐다.

○ 또한, 물놀이를 할 수 없는 수경시설은 어린이나 주민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울타리나 관리인을 두어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시설도 3곳으로 확인됐다.

-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출입금지 안내판과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개선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 이번 실태점검은 안전한 물놀이와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신고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사전 실태점검으로,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 다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지난 7월 28일 이후부터는 설치·운영 신고,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아울러, 8월 중순 이후에는 이번 실태점검 시 기준에 미달한 시설을 포함하여 본격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병행될 예정이다.
- 정경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지자체의 시설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며, “제도 운영의 미비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사전 실태점검 결과.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 점검결과

(단위 : 개소)

합 계	적정관리	관리 미흡시설		
		유리잔류염소 기준미달	탁도,pH 기준초과	출입금지 표지판 미설치
109	88	18	(2)*	3
100%	80.7%	16.5%	(1.8%)	2.8%

* () : 동일 시설에서 유리잔류염소 항목과 탁도, pH 항목 수질기준 미준수

☐ 수질기준 미준수 시설(18개소)

연번	시설	pH (5.8~8.6)	탁도 (4NTU 이하)	대장균 (200개체수/ 100mL미만)	유리잔류염소 (0.4~4.0mg/L)
1	A	8.5	<u>7.11</u>	3	<u>0.01</u>
2	B	<u>9.7</u>	<u>9</u>	5.2	<u>0.02</u>
3	C	8.3	0.38	불검출	<u>0.3</u>
4	D	7.7	0.6	불검출	<u>0.1</u>
5	E	7.5	2	불검출	<u>0</u>
6	F	8.3	1.2	56	<u>0</u>
7	G	8.1	2.6	124	<u>0</u>
8	H	7.4	1.5	불검출	<u>0.3</u>
9	I	7.3	2.6	불검출	<u>0.1</u>
10	J	7.3	3.8	3	<u>0</u>
11	K	7.8	0.9	불검출	<u>0.1</u>
12	L	7.7	1.5	불검출	<u>0.1</u>
13	M	7.8	1	불검출	<u>0.1</u>
14	N	7.7	0.6	불검출	<u>0.2</u>
15	O	7.8	2.8	10	<u>0.2</u>
16	P	8.0	1.5	불검출	<u>0.3</u>
17	Q	7.7	0.5	불검출	<u>0.2</u>
18	R	8.1	0.83	불검출	<u>0.07</u>

□ 출입금지 표지판 미설치 시설(3개소)

연번	시설	점검결과
1	A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외시설,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권고 ※ 점검 이후 안내판 설치 등 개선완료
2	B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외시설,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권고 ※ 점검 이후 안내판 설치 등 개선완료
3	C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외시설,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권고 ※ 점검 이후 안내판 설치 등 개선완료

1.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법제화 주요 내용은?

○ (설치·운영 신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15일 전까지 환경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 (수질기준 준수) 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개 항목

측정 항목	수질기준
수소이온농도	5.8 ~ 8.6
탁도	4 NTU 이하
대장균	200 개체수/100mL 미만
유리잔류염소*	0.4 ~ 4.0 mg/L (염소소독 시)

* 법제화 이전에는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등 3개 항목만 지침으로 관리함.

○ (관리기준 준수)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및 공개,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부유물·침전물 수시제거, 저류조 청소 또는 용수 여과기 통과, 이용자 주의사항 등 안내판 설치 등

○ (행정처분 신설) 미신고, 수질 및 관리기준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한 경우	100	200	300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 (적용 시점) 법 시행일인 2017년 1월 28일부터 적용되며, 법제화 이전 설치·운영 시설은 6개월간 유예되어 2017년 7월 28일 이후부터 적용

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범위는?

- ①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 운영 시설 전체,
- ② 관리 필요성이 높은 민간시설*(이용객의 출입이 많고 전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이 해당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16.1.27 개정·공포, '17.1.28 시행) > —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
- 2.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일반수경시설에도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의 무가 부과되는지?

○ 물놀이 시설이 아닌 일반수경시설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정기적 수질검사와 수질·관리기준 등 적용 제외

- 일반수경시설의 경우 물놀이 금지표시 및 안내문 등을 설치하고,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관리하거나 출입을 감시·제한하는 관리인을 두도록 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구분

4.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방안은?

-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 도입시 민간 아파트 등 민간시설에 대해 법적 대상 편입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 과도한 대상확대로 인한 제도와 현장의 괴리 우려와 제도 준수 가능성을 고려한 확대방안 도출 필요성이 제기되어 우선 공공시설과 타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민간시설로 한정함.
- 현재, 민간시설 법적관리 대상 확대, 자율관리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17.3~11)을 진행중에 있으며,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임.
 - 확대 시점 전까지는 신고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준하는 관리를 지자체와 시설 운영자에게 홍보하고 독려중임.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수영장, 유원시설업의 허가·신고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 등은 제외)을 말한다.
- (유리잔류염소) 물을 염소로 소독했을 때의 잔류염소 중 차아염소산(HOCl)과 차아염소산 이온(OCl^-)의 형태로 존재하는 염소를 의미하며, 일정 농도 이상에서는 대장균 등 미생물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옴.

**정부 예산·법령·정책은 “일자리 중심” 으로 설계·운영
-고용영향평가 강화·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방안 일자리委 의결-**

- ▲ 일자리 효과 중심으로 예산편성·정책설계·법령 개정
- ▲ 일자리사업은 사업성과도 고려하여 예산 편성

- ☐ 8.8(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이 의결되었다.
- 위 안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고용영향평가를 예산·정책·법령 등 국정 전반으로 확대·강화하고,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체계를 혁신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고용영향평가 강화》

❖ 주요 내용

- ▲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대폭 확대 및 평가 결과의 예산 연계 강화
- ▲ 산업별 주요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실시 및 고용친화적 정책개선 유도
- ▲ 제·개정 법령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도입

- ☐ 앞으로 고용영향평가는 예산편성의 중요기준으로 활용되며, 주요 정책과 법령에 이르는 국정 전반에 확대·강화된다.
- [예산사업] '16년부터 시범평가 수준으로 운영되던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는 내년 1,000여개 사업*, 향후에는 전체 예산사업까지 확대된다.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체, 100억원 이상 R&D, SOC, 공공조달 사업
- 평가 결과 예산 10억원 당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들에 대해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된다.
 - 고용부는 평가대상 확대에 따라 그간 고용효과를 담당부처에서 자체 산출하던 것을 고용영향평가센터(現 노동연구원)에서 전담 산출하도록 하여 부처의 부담은 줄여주는 한편,
 -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통해 고용효

과 산출 기법 등을 지속적으로 정교하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부처] 고용부·기재부·과기부·산업부·여가부

[연구기관] 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 한국은행, KDI, 산업연구원, 고용정보원 등

- [주요정책] 산업별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창출효과를 평가하여, 각 부처에서 고용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 평가 전 과정에 부처·노사·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진을 구성하여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고용의 질(고용형태·임금수준·성별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 아울러 협의회를 통해 평가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메타평가(평가자체의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평가기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평가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예산사업·주요정책 고용영향평가지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컨설팅 제공과 평가결과 DB구축 등을 통해, 평가결과가 실제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법령 고용영향평가 도입]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다.
- 담당 부처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법령 제·개정이 가져오는 고용효과를 검토하고,
-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법령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층분석을 통해 법령의 보완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 한편,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법령은 규제위·법제처 심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고용영향평가 실시계획 및 시행 결과는 매년 일자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 주요 내용

- ▲ 정부부처·지자체별로 따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들의 효율화 추진 및 고용효과·사업성과(취업률 등)의 예산반영 체계 마련,
- ▲ 직업훈련·고용서비스의 품질관리체계 구축
- ▲ 집행현장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강화

□ 중앙·자치단체에서 연간 약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관리도 대폭 개편된다.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① 직접일자리(한시적 일경험 및 소득보조 제공), ② 직업훈련(실업자·재직자 직업능력 제고), ③ 고용서비스(구인·구직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④ 고용장려금(채용·고용안정 등 보조금), ⑤ 창업지원 ⑥ 실업소득(구직급여 등)

○ **[문제점]** 그간 중앙부처 185개('17년), 지자체 4,186개('16년) 등 지나치게 많고 유사·중복되는 사업들이 부처별·지역별로 각각 추진되면서,

-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의 범정부 서비스 품질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률은 낮고, 상당수 참여자가 일자리사업에만 반복참여하는 등 민간일자리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니터링이 부족하고 사업성과가 예산과 연계되지 않아 일자리 예산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혁신방안]** 매년 전체 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와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마련,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등 효율화를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단위 일자리 전담부서를 통해 지자체 간 유사·중복사업을 점검하여 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중앙부처 사업을 조정 운영하는 등 자체 총괄기능을 강화한다.

- 필요한 국민들이 제 때, 쉽게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방식과 내용도 개편된다.
 - ▲ 직접일자리는 50개 사업(17년)을 워크넷을 통해 통합 공고하고 참여 신청을 받아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자들이 민간일자리로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 ▲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의 경우 범정부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 **[고용서비스]** '(가칭)고용서비스 품질센터'를 신설하여 표준서비스 인증기준 제정
 - [직업훈련]** 범부처 훈련사업 논의 위한 '(가칭)국가인적자원개발 협의회' 구성 및 범부처 직업훈련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이와 함께,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현장 모니터링과 사업 성과평가도 대폭 강화된다.**
 - ▲ 일자리사업평가팀(한국고용정보원)의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집행과정의 애로사항 및 예산낭비 요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소관부처에 전달·해소하고,
 - ▲ 개별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고용효과(10억원당 고용창출)와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 목 적

- 각종 정책 등의 수립·추진에 따른 고용 효과를 사전·사후적으로 분석하여 그 정책 등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

□ 경과 및 내용

- '09년 고용영향평가 법적 근거 마련(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 (정책대상 고용영향평가) '10년 시범평가(7개 과제)를 시작으로 '11년부터 본격 실시 ('11~'17년, 총 204개 정책 평가 실시)
 - '13년, 평가 전담기구로 고용영향평가센터(노동연) 설치

- (대상) 일자리의 양·질에 영향을 각종 계획·정책·제도·규제
- (내용) 정책 등의 고용효과(양·질) 분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안 발굴
- (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각 부처에 개선권고 → 각 부처는 **자발적 개선**
- (절차) 대상 선정(고용정책심의회) → 평가 실시(노동연 주관, 6개월 내외) → 평가결과 협의(고용부-부처) → 개선권고 → 개선현황 점검(고용부)

-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 '16년 185개(시범), '17년 249개 재정사업 평가 실시
 - '16년 시범실시는 산출식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지적 → '16.하반기 재정사업 유형별로 산출식 연구('17년 現 산출식 적용)

- (대상) 100억원 이상 재정사업 중 각 부처가 자체 선정
- (내용) 해당 사업의 **10억원당 일자리 창출 효과** 사전 분석
- (활용) 기재부가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절차) 예산편성지침 반영(기재부) → 평가 가이드라인 배포(고용부) → 일자리 창출 효과 산출(각 부처) → **노동연 검토** → 예산편성시 활용(기재부)

❖ 추진 원칙

- ▲ 각 부처 예산사업·정책이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도록 인센티브 재설계
- ▲ 정확한 평가로 고용효과 부풀리기를 차단하고 평가신뢰성 확보
- ▲ 평가 강화가 형식적 절차나 불필요한 업무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평가시스템 설계
- ▲ 고용형태·성·임금·근로시간 등 고용의 질에 대한 평가 강화
- ▲ 주요부처·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가칭)고용영향평가 협의회” 구성하여 주요사항 협의·결정

□ 재정사업(세출예산·기금)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 효과가 예산편성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연계

○ (평가대상 확대) 각 부처에서 자체 선정하던 대상사업을 전체 일자리 사업과 100억원 이상 R&D, SOC, 공공조달사업으로 확대하고, 매년 부처 협의를 거쳐 예산편성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명시

○ (평가결과와 예산편성 연계) 일자리사업은 고용영향평가 결과와 사업 성과(취업률, 고용유지율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비일자리사업은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시 활용

* (예시) 같은 유형 사업들을 상대평가하여 5단계 등급 부여 → ①동일 유형 내 A등급은 예산 증액, ②E등급은 예산 감액, ③ 신규 사업은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 순으로 신설 검토 등

○ (부처부담 경감 및 정확도 제고) 종전 부처에서 자체산출하던 것을 노동연구원에서 전담 산출하도록 하여 부처 부담을 줄이고, 고용효과 산출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평가 정확도 제고

* ① 산출식에 적용하는 산업별 고용계수 세분화, ② 사업의 직·간접 고용효과에 더해 사업 완료 후 고용효과 제시, ③ 주요 예산사업은 질적 고용효과(고용형태·임금수준·성별 등) 제시, ④ 관계부처·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가칭)고용영향평가 협의회」를 통해 산출식 지속 보완

- 일자리·SOC·R&D 등 사업군별 고용창출 경로를 분석하여, 고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공통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컨설팅 제공

□ 각 부처의 정책(세제·규제·법령)들이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친화적으로 개선되도록 제도화

○ (정확도 제고) 고용영향평가센터(現노동연구원)와 KDI,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진 구성, 부처·노사의 참여 및 자문 강화

* 고용영향평가협의회 주관, 평가결과와 실제 고용효과 점검, 평가과정·방법 적정성 평가

- 고용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해 평가 표준매뉴얼을 마련, 평가 결과에 대한 메타평가(평가자체의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 → 평가기법 지속 보완 및 평가품질 제고

- 예산사업·주요정책 고용영향평가지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

○ (고용의 질 고려) 그간 미흡했던 고용의 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새로운 직업창출 등 미래일자리에 대한 영향도 평가에 포함

* 고용형태(상시·임시·일용), 임금수준, 임금격차, 근로시간, 근속연수, 성별 등

○ (평가결과 활용의 제도화) 정책 개선방안 실행에 따른 구체적 (기대) 고용효과를 제시하고, 정책 반영절차 및 유인구조*를 마련

* 개선방안 이행에 대해 부처 컨설팅을 제공하고, 평가결과와 부처별 이행방안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 (이행 우수부처는 정부업무 평가시 가점 부여)

○ (입법단계 고용영향평가 도입) 고용의 양·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개정 법령의 고용효과 및 개선방안 도출 →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큰 법령은 심층분석 후 법령안 수정 권고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한 도입 ('17. 下 개정안 국회 제출)

- 입법계획을 토대로 고용효과가 큰 법령은 규제위·법제처 심사 Fast-track 지원

○ (평가 인프라 강화) 확대·강화된 고용영향평가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센터(現 노동연구원) 조직 및 예산 확대

- (개념)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 ①직접일자리, ②직업훈련, ③고용서비스, ④고용장려금, ⑤창업지원, ⑥실업소득 지원 등 6가지로 분류 (OECD, Labor Market Programmes의 분류기준 변형)

- (현황) 각 부처·지자체별로 중앙 185개, 지자체 4,186개 사업

- (중앙) '17년 일자리사업은 185개, 예산 17.1조원 규모(25개 부처)

<일자리 사업 수·예산·소관부처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합계	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사업 수	185	50	53	32	19	21	10
매칭사업	53	28	14	4	1	6	—
예산규모	170,736	27,069	22,460	7,999	31,752	22,003	59,453
비중	(100.0)	(15.9)	(7.0)	(4.7)	(18.6)	(12.9)	(34.8)
소관부처수	25	19	17	7	5	9	2

- (지자체) 일자리 사업은 전체 4,186개, 이 중 예산 파악이 가능한 3,288개 사업*의 예산은 총 2조 6,608억 원 ('16년)

* 지자체 사업현황 조사 시 응답을 거절(200개) 미응답(698개)한 사업 제외

- (OECD 비교) 직접일자리 지출비중은 OECD 최고 수준인 반면, 취약계층 취업을 돕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지출은 낮은 상황

* 직접일자리 지출은 고용률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 (KDI, '13년)

< 일자리 예산 국제 비교 ('15년, GDP=100) > (단위 : %)

구분	합계	적극적 노동시장							소극적 노동시장
			직접 일자리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창업지 원	보호 및 지원	
OECD	1.32	0.53	0.07	0.13	0.13	0.10	0.01	0.09	0.78
한국	0.67	0.36	0.20	0.04	0.04	0.04	0.02	0.02	0.32

* 보호 및 지원고용:노동능력이 감소된 사람들(장애인 등)의 노동시장 통합 정책

- 고용부와 기재부에서 전체 일자리사업 총량만을 파악·관리

* 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중앙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진행

❖ 일자리사업 효과성 관련 언론보도

- ▶ 「쫄비기업 먹여 살리는 16조 일자리사업」 (조선일보, '16.9.27)
- ▶ 「'질보다 양' 청년 올리는 청년고용사업」 (뉴시스, '16.10.20)
- ▶ 「햇바퀴 도는 정부일자리사업 매년 수조 쓰고 효과는 '글썄'」 (세계일보, '17.1.10)

❖ 제각기 운영되는 중앙정부·자치단체 일자리사업

- ▶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담당자) “중앙 부처에서 총괄 조정하는 부분이 잘 안 되고 ... 중앙에서 각기 놀다 보니까 기초지자체에서도 각기 노는 것이다.”
- ▶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담당자) “중앙부처의 총괄 조정 기능이 있으면 관리를 할 텐데 없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중복되어 있다. 다른 기관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정보가 없다.”

* 2015, 한국고용정보원

❖ 일선 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 ▶ (상담서비스 담당자) “... 민원인은 저희 상담사 말보다 훈련기관 말을 더 신뢰해요 ... 상담사 1명이 150명을 채워야 하는데 한 사람당 30분 하기도 빠듯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직업선택도 검사를 두 개 했는데 지금은 한 개로 줄여요.”

* 2015,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발생하는 사중손실 ⇒ 사업 효과성 저하

- ▶ (직업훈련상담사) “... 저희들 입장에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훈련 목적으로 하는 것이 눈에 보여도 안 받을 수 없는 실정이고요 ... 자격증이 있는데 추가로 하나 더 배우고 싶다거나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 2015, 한국고용정보원

❖ 일자리사업에만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일자리사업 직장인’

-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경우 '13.1월 ~ '16.6월 참여자 중 해당 사업에 10번 이상 참여한 사람이 13명, 최다 참여 횟수는 21회

* 2017, 사회보장위원회

1 문제점

❖ **일자리사업이 다양한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각 부처 - 기재부 소관과' 별로 따로 예산 편성 진행** → 고용부가 일자리사업들의 평가 결과에 근거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도, 제도적으로 **사업 계획단계부터 전체 일자리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사업 개편 및 조정·부처 간 이견 조율이 매우 어려운 구조**

- **(지나치게 많은 사업)** 중앙부처·지자체별로 수많은 사업을 각각 추진하여 국민들의 혼란들이 가중되고 정책체감도 저하
 - **(중앙부처)** 수시로 사업을 신설·폐지하고 참여자 관리도 미흡, 수행 기관·지자체에 일률적으로 물량을 배정하여 사업성과 저조
 - * 일모아시스템 상 참여자정보 관리대상 일자리사업 119개 중 참여자 정보 미입력 사업은 장애인직업능력개발사업,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등 46개 ('17.5월)
 - **(지자체)** 중앙정부 - 광역단체 - 기초단체 상호 간 유사한 자체사업을 유사·중복 검증 및 성과관리 없이 추진
 - * **(지자체 담당자)** "중앙의 총괄·조정 기능이 없어 지자체에서도 유사·중복이 많다."
"대부분 중앙정부 사업의 모델을 따다가 사업을 확대한다."
- **(접근성과 품질이 낮은 사업)** 일자리사업 통합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범정부적인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부재
 - **(통합 일자리정보 제공 미비)** 수많은 지자체·수행기관들이 각각 수시로 참여자 모집·홍보를 수행하고, 정보망 간 연계가 미비하여 국민들의 접근성 저하
 - * **대학생 청년정책 인지도:** 취업지원 31.7%, 창업지원 31.7%, 직업훈련 21.7% ('15, 한고원)
 - **(표준 서비스제공 미흡)** 수많은 고용서비스기관의 표준 서비스수준 가이드라인이 없고, 직업훈련과정의 범정부 품질관리체계 미비
 - * 고용센터의 경우 담당인력 대비 과도한 프로그램·물량 확대로 취업활성화 약화
고용센터 담당자 1인당 구직자 수('16년): (韓) 505.9명, (獨) 49.5명, (日) 69.3명
 - * 고용부 소관 직업훈련에만 훈련기관·프로그램 인증 및 훈련성과 관리 실시

- (민간일자리 이동지원 미흡) 취업계층의 취업에 효과적인 직접일자리-직업훈련-고용서비스 패키지 지원이 부족
 - (중복·반복참여) 참여자의 취업률이 낮고, 상당수가 사업에 반복·중복 참여하는 정부지원 함정(trap)에 빠짐
 - * 직접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중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 기관 비중 → 48.2% ('14)
 - '15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반복참여율은 56.2%
 - (나쁜 일자리 양산) 취업취약계층의 민간일자리 이동을 위한 일경험 제공이 아닌 상시적 업무*를 직접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여 참여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입·이직 반복
 - *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등 공공업무지원·사회서비스 직접일자리사업 중 21개 사업
 -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의 경우 반복참여율 82.5%, 참여자 평균 근무기간 4.5년('15년)
- (모니터링 및 성과 환류 미비) 사업평가 결과가 사업구조 개선에 반영되지 않고*, 중앙·지자체 전체 일자리사업의 모니터링도 미흡
 - * 「고용정책기본법」에는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의무만이 명시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방안

- ① (조정기능 강화) 중앙·지자체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의 총괄 조정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전략적으로 활용
 - (중앙정부) 고용부가 마련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정부 전체 일자리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과 연계한 절차* 마련
 - * ① 고용부에서 일자리사업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 → 각부처 사업 설계에 활용
 - ②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와 고용효과를 고려한 효율화 방안을 마련, 일자리추에서 확정 → 기재부는 이를 일자리사업 예산 편성에 활용
 - (지자체) 일자리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자체 일자리사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지자체 일자리사업의 연계 추진
 - * ① 중앙-지자체 간 유사·중복사업 점검, ② 지역 여건에 맞게 중앙정부 사업 요건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③ 고용부는 지자체 자체사업 성과관리 지원

② (수요자 친화적 사업 개편·운영)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질 높은 일자리사업을 쉽게 알고 참여

- (민간일자리 이동지원)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50개 직접일
자리사업을 묶어 브랜드화하고 참여자의 취업지원 강화*

* ① 통합 사업안내·모집공고 실시, ② 취업능력이 있는 참여자의 반복·중복참여 방지,
③ 참여 이후 직업훈련·취업알선을 위한 고용서비스기관 연계 강화
(「중앙-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운영 합동지침」 활용)

- (고용서비스·직업훈련 품질관리) 고용서비스기관의 표준 품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범정부차원의 직업훈련 통합관리체계 구축**

* 고용서비스품질센터를 신설하여 표준서비스 인증기준 제정

** 범부처 훈련사업의 주요사안을 논의하는 '(가칭)국가인적자원개발 협의회'를 구성하고 고용부
산하 훈련품질관리기관을 범부처 직업훈련 성과지원 전문기관으로 확대

- (고용장려금 단순화) 다양하고 복잡한 장려금사업을 통합·단순화하고,
온라인에서 지원요건 확인 및 즉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③ (성과평가·효율화 지속) 성과에 근거한 일자리사업의 지속적 효율화

-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
으로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

* 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애로사항 점검 → 소관부처에 전달·조치, ② 평가과정에 각
부처 참여 보장, ③ 평가결과 DB 구축 ④ 일자리사업평가조직 확대 등 인프라 강화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 조정 절차 (안)

- ① 각 부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평가결과 제공 (고용부, ~3월)
- 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고용부)
↳ 일자리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 확정, 기재부 및 소관부처에 통보 (~3.25)
- ③ 일자리 지출한도 및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예산안 편성지침 마련·통보 (기재부, ~3.31)
- ④ 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산출 및 신규사업 유사·중복 확인 위한 사전협의 (고용부, ~6.10)
- ⑤ 사업 평가결과와 고용효과 반영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고용부)
↳ 일자리위원회에서 효율화 방안 확정, 고용부가 기재부 및 소관부처에 통보 (~6.15)
- ⑥ 효율화 방안을 반영한 일자리사업 예산 편성(안) 국회 제출 (기재부, ~8.31)
↳ 효율화 방안의 일자리에산 반영 내용을 일자리위원회에 보고 (고용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 '학교 밖 청소년 대학입시설명회' 참가신청 8월 7일부터 온라인접수 -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2018학년도 하반기 맞춤형 대학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며, 8월 7일(월)부터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을 받는다.
- 하반기 대입설명회는 오는 18일(금) 전북 전주를 시작으로 서울(8.21), 천안(8.22), 창원(8.29) 총 4개 지역에서 차례로 열린다.

<2017년 하반기 학교 밖 청소년 대입설명회 일정>

개최지	일시	장소	문의처
전주	8월 18일(금) 14시~17시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3층 국제회의장	063-273-1388 전라북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울	8월 21일(월) 14시~17시	서울 여성플라자 1층 대강당(아트홀봄)	02-2285-1318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천안	8월 22일(화) 14시~17시	천안 축구센터 2층 대세미니실A	041-554-1380 충청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창원	8월 29일(화) 14시~17시	창원문화원 1층 대강당	055-273-1380 경상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여성가족부는 대학입시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 대입설명회 16회('15년 9회, '16년 7회) 개최. 1,900여명('15년 600명, '16년 1300명) 참석

- 이번 설명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허향진)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전문강사들이 ▲2018학년도 대입 전형 주요 사항, ▲검정고시 출신자를 위한 대학별 특별전형 및 특성화 학과,

▲ 수시전형 지원가능 대학 및 지원전략 등을 안내한다.

- 또한, 대입상담교사단이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및 모의고사 성적표 등을 참고자료로 개인별 1:1 맞춤형 입시상담도 제공한다.

□ 하반기 대입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청소년 및 부모는 8월 7일(월)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www.kdream.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설명회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 대입설명회 관련 사항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박선옥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은 “해마다 4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지만, 이들 가운데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하는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라며, “대입 설명회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학업지원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 학교 밖 청소년 하반기 대학입시 설명회 개요

□ 개 요

- 주 최 : 여성가족부
- 주 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협 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대 상 : 학교 밖 청소년 및 부모(보호자)

□ 개최일정

- 하반기 대입설명회 : 8.18(금)~8.29(화)

개최지	일시	장소	문의처
전주	8월 18일(금) 14시~17시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3층 국제회의장	063-273-1388 전라북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울	8월 21일(월) 14시~17시	서울 여성플라자 1층 대강당(아트홀봄)	02-2285-1318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천안	8월 22일(화) 14시~17시	천안 축구센터 2층 대세미니실A	041-554-1380 충청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창원	8월 29일(화) 14시~17시	창원문화원 1층 대강당	055-273-1380 경상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상반기 설명회 청주(4.20), 부산(4.25) 광주(4.27), 서울(5.11) 개최, 774명 참석

□ 주요내용

-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정보 안내 및 자료집 제공
 - 검정고시출신자를 위한 대학별 특별전형 및 특성화 학과 설명
 - 수시전형 지원 가능 대학(대학별) 및 지원전략 안내
 - 1:1 맞춤형 입시상담(검정고시 및 모의고사 성적표 등 참고자료 지참)

※ 1:1 입시상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권역별 전문강사(35명)

□ 참가방법

- 참가가 용이한 지역 및 일정에 맞추어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등록 후 참여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www.kdream.or.kr) 대입설명회 온라인 참여 게시판 신청
- 세부사항은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문의

괴산·함평·춘천·청주·대전 투자선도지구 5곳 지정

규제특례·재정지원 등 혜택...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기대

-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대전 안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전략사업 5개가 '17년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거쳐 괴산 '자연드림타운',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5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 '17년 투자선도지구 선정사업 >

구 분	지자체	사업명	주요 내용
발 전 촉진형	충 북 괴산군	자연드림타운	유기농 가공품의 생산·판매에서 유기농 생태 관련 체험·교육까지 제공하는 6차 산업형 테마파크 개발
	전 남 함평군	축산특화산업단지	함평 한우 등 농축산물을 소재로 다양한 오감체험 및 즐거움을 제공하는 테마관광·생산거점 구축
	강 원 춘천시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소양강댐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조성
거 점 육성형	충 북 청주시	오송 화장품뷰티	바이오산업과 화장품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케이(k)-뷰티 산업의 세계적 거점 육성
	대 전 광역시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국방 관련 기관 및 학계 등과 연계한 첨단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지원법' 시행('15년 1월)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그 외 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된다.

-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 및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발전촉진형은 여기에 더해 조세·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도 받게 된다.

< 투자선도지구 주요 인센티브 >

구 분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혜 택	재정지원(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발전촉진형 중 성장촉진지역	-
	조세(법인세·소득세 등)·부담금 감면	-
	규제 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등 73개)	
	자금지원(지자체), 인허가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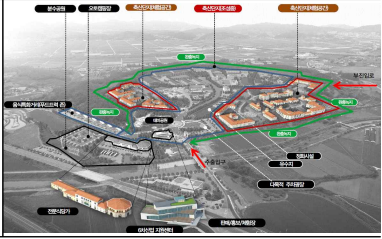
-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충북 괴산 자연드림타운

위치	기간	사업비	사업내용(주요도입시설)	조감도
괴산군 칠성면 울지리 산15 (1,222천㎡)	2018~ 2022년	2,604억원 (국비 540, 지방비 72, 민자 1,992)	자연을 향유하는 지속가능한 생태순환형 테마단지 조성 (유기농식품 가공 공장, 물의정원, 테마마을 등)	

- 유기농 가공품 생산·판매에서부터 체험·교육까지 제공하는 6차 산업형 테마파크로, 유기농 생태를 기본주제(콘셉트)로 한 복합 관광단지이자 주민들의 휴식·여가공간으로 조성된다.
- 가공품 생산시설, 유기농 생태체험장 등과 함께 물의 정원, 테마마을, 컨벤션센터, 공연장·숙박시설 등이 집적될 예정이며,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위치	기간	사업비	사업내용(주요도입시설)	조감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960번지 (320천 m ²)	2018~ 2022년	1,382억원 (국비 100, 지방비 208, 민자 954, 기타 119)	청정 농축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 특화단지 조성 (6차산업지원센터, 축산가공시설, 공원·주차장 등)	

- 함평 한우 등 지역의 청정 농축산물을 명품화·집적화하여 지역대표 상품으로 육성하면서, 시각·촉각·미각 등 신선한 오감체험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6차 산업단지로 조성된다.
- 축산 생산 단지, 음식특화거리, 체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여 함평 나비축제 등 주변지역 자원과 연계한 테마형 관광지로 육성하고, 6차 산업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입주업체 및 지역 농가 지원, 홍보·교육·연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③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위치	기간	사업비	사업내용(주요도입시설)	조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907번지 (995천 m ²)	2018~ 2022년	2,636억원 (민자 2,636)	친환경 생태주거단지와 수열원 에너지 네트워크 (친환경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물기업특화산업단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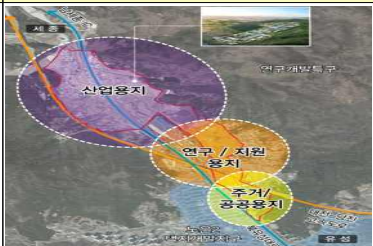
- 소양강댐의 수열에너지(심층냉수)를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하여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인 ‘케이(K)-클라우드 파크’, ‘스마트 팜 첨단 농업단지’, ‘물 기업 특화산업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수열에너지와 수상 태양광 에너지만을 사용하는 국내 최초의 탄소 제로형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미래 수자원 신산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충북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

위치	기간	사업비	사업내용(주요도입시설)	조감도
흥덕구 오송읍 상정리 438번지 (931천㎡)	2017~ 2023년	2,100억원 (국비 162 억원, 민자 1,938억원)	바이오기술과 연계한 화장품 산업 육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 (산업시설 및 연구소, 화장품뷰티 진흥센터, 벤처기업창업지원관 등)	

- 오송 바이오밸리 내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바이오산업과 화장품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케이(K)-뷰티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화장품 임상연구 지원센터, 수출지원 센터, 화장품 뷰티 진흥센터 등을 건립하고,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국책연구기관, 바이오 메디컬 시설 등과 연계하여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⑤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위치	기간	사업비	사업내용(주요도입시설)	조감도
유성구 안산동 83-1번지 (1,347천㎡)	2018~ 2022년	7,417억원 (민자 7,417)	국내 최대 국방인프라와 대덕특구 연계한 첨단국방융합단지 조성 (국방산업단지, 연구 및 지원시설, 주거 및 공공용지 등)	

- 대전과 그 주변 지역에 위치한 다수의 국방 관련기관(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소, 각종 국방 관련학교 등)들과 연계하여 새로운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기업을 육성하는 첨단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 단지 내에 국방컨벤션센터, 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 민군협력진흥원 등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고, 첨단 센서 집적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인 첨단 센서 산업과도 연계하

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선도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약 1조 5천 억 원의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라며,
-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 지원함과 동시에 공간 배치, 디자인 등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고품격 지역개발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적용대상 및 유형

- (적용대상) 수도권.제주를 제외한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잠재력이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역세권 등

- (유형)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낙후지역 외의 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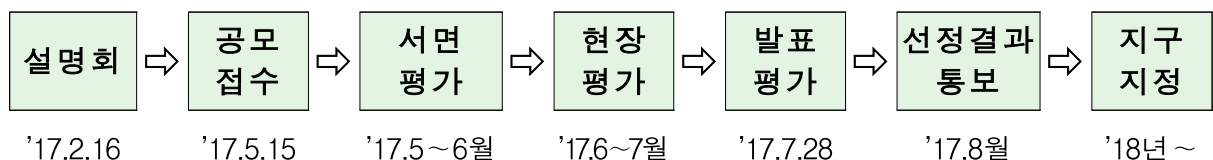
□ (주요 인센티브)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73종 규제특례(공통), 세제·부담금 감면(발촉형) 및 재정지원(성장촉진지역 개소당 100억원 이내) 등

< 투자선도지구 유형별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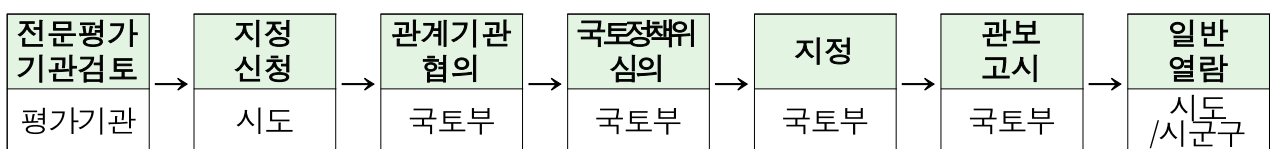
구분	발전촉진형(발촉형)	거점육성형(거점형)
대상지역	낙후지역(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	낙후지역 외 지역
투자·고용	500억 투자 또는 100인 고용	1,000억 투자 또는 300인 고용
규모	3만㎡ 이상	10만㎡ 이상
혜택	재정지원(기반시설) *성장촉진지역에 한해 지원	-
	조세(법인세·소득세 등)·부담금 감면	-
	규제특례(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등 73개) 자금지원(지자체), 인허가 지원 등	

* 필요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고용규모 기준 완화 가능

< 2017년 투자선도지구 공모 절차 >



< 투자선도지구 지정 절차 >



모든 해양레저스포츠가 여기에 제1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막 - 8.17~20 보령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려.. 20만 해양레저스포츠인 참여 -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행사인 '제1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17일(목) 막을 올린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개최하고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하나되자! 보령에서 함께 열자! 해양의 꿈'이라는 주제로 4일(8.17~8.20)간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 해양스포츠제전 상징물 >

하나되자! 보령에서 함께열자! 해양의 꿈		
<대회구호>	<포스터>	<마스코트>

이번 제전에서는 핀수영, 카누, 철인3종, 요트 경기 등 정식종목 4종과 바다수영, 드래곤보트, 고무보트, 카이트보딩 등 변외종목 4종의 경기가 개최되어 짜릿한 해양스포츠의 진수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바다 위에서 빠르게 질주하며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할 수 있는 모터보트 체험, 바나나보트·땅콩보트 체험과 잔잔한 바다를 느낄 수 있는 씨카약·크루즈보트 체험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서서 탈 수 있는 SUP보트*, 바다 위에서 낙하산 모양의 연을 타는 카이트보딩(Kite Boarding) 등 색다른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 Stand Up Paddle Boat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활동 장면 >



딩기요트 체험



카약 체험



래프팅 보트 체험

또한, 열기구·행글라이드 타기, 페이스페인팅, 칼라머드 페인팅 등 축제분위기를 한껏 낼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와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공군 특수비행팀의 블랙이글쇼, 국제범선쇼, 패러글라이딩 축하쇼 등 풍성한 볼거리들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개막식 행사에는 유명 연예인*들의 축하 공연과 해상불꽃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축제의 흥을 한껏 돋을 예정이다.

* 그룹 위너, 러블리즈, 블랙비바스타즈 등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회사에서 “이번 제전이 해양레저스포츠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참가하는 풍성한 바다 축제가 되길 기대하며, 아울러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을 갖춘 보령이 이번 제전을 통해 해양레저스포츠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되기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이번 제전 프로그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누리집 (boryeongleports2017.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회개요**

- 기 간 : 2017. 8.17(목) ~ 8.20(일) (4일간)
- 장 소 : 보령시 신항동 대천해수욕장 일원
- 참여인원 : 200,000여명(임원.선수 10,000여명 포함)
- 주최/후원 : 해양수산부/충청남도
- 주 관 : 보령시, 대한체육회가맹경기단체,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경기종목 및 부대행사 프로그램
 - 정식종목 : 요트, 핀수영, 카누, 철인3종
 - 번외종목 : 바다수영, 드래곤보트, 고무보트, 카이트보딩
 - 체험종목 : 씨카약, 모터보트, 토크보트체험(바나나보트, 땅콩보트), 크루즈보트, 게러워이, SUP패들보트, 카이트보딩
 - 문화행사 : 패러글라이딩 축하쇼, 각설이타령, K-POP커버댄스 페스티벌 등

□ **주요 공식행사**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장 소
8.17(목)	공식행사	09:00~17:00	◦ 요트경기 및 바나나보트 체험 등	보령요트경기장, 대천해수욕장
8.18(금)	개회식	19:00~19:40	◦ 개막 선언, 환영사, 대회사 등	대천해수욕장
	식후행사	19:40~21:50	◦ 축하공연, 불꽃놀이 등	"
8.19(토)	공식행사	07:00~20:00	◦ 정식 및 번외종목 경기, 체험 등	보령요트경기장, 남포방포제조류지, 대천해수욕장
8.20(일)	폐회식	17:00~17:23	◦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폐회 선언	"

□ 역대 개최 현황

구분	1회(06)	2회(07)	3회(08)	4회(09)	5회(10)	6회(11)	7회(12)	8회(13)	9회(14)	10회(15)	11회(16)
기간	8.12~15	8.10~13	7.26~29	8.7~10	7.22~25	8.12~15	8.10~13	8.15~18	8.14~17	8.13~16	8.12~15
장소	울진	삼척	목포	통영	포항	남해	부산	부산서구	울주	여수	울진
인원	3.6만명	4.8만명	4.8만명	4.7만명	4.9만명	15.9만명	5만명	118만명	26만명	23만명	5만명

참고 2

경기별 일정

구분	내용 및 종목	기 간				장 소	주 관
		8.17. (목)	8.18. (금)	8.19 (토)	8.20. (일)		
공식 행사	개 회 식		●			머 드 광 장	해 양 수 산 부 보 령 시
	폐 회 식				●	머 드 광 장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정식 종목 (4)	요 트	●	●	●	●	보령요트경기장	대 한 요 트 협 회
	카 누			●	●	대 천 해 수 욕 장 (시 민 탑 광 장)	대 한 카 누 연 맹
	핀 수 영			●	●	대 천 해 수 욕 장 (머 드 광 장)	대한수중.핀수영협회
	철 인 3 종			●	●	대 천 해 수 욕 장 (시 민 탑 광 장)	대 한 철 인 3 종 협 회
번 외 종 목 (4)	바 다 수 영			●	●	대 천 해 수 욕 장 (머 드 광 장)	한국바다수영협회
	드 래 곤 보 트			●		남포방조제조류지	한 국 해 양 소 년 단 연 맹
	고 무 보 트				●	남포방조제조류지	한 국 해 양 소 년 단 연 맹
	카 이 트 보 딩		●	●	●	대 천 해 수 욕 장 (분 수 광 장)	미 정
체 험 종 목	씨 카 약	●	●	●	●	대 천 해 수 욕 장 일 원	한 국 해 양 소 년 단 연 맹
	승 선 체 험		●	●	●		
	요 트 체 험		●	●	●		
	토 우 잉 보 트	●	●	●	●		
	해 상 관 램		●	●	●		
	이 색 체 험	●	●	●	●		
	머 드 체 험	●	●	●	●		
해양 문화 행사	축 하 공 연		●	●	●	머 드 광 장	대 행 업 체
	기타 문화행사	●	●	●	●		대 행 업 체

※ 행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추가·변경 될 수 있음

참고 3

종목별 시상계획

종 목	구 분	종목	부별	시상계획					
				상 장			메 달		
				장관	도지사	시장	금	은	동
총 계		28	130	130	144	158	406	414	422
요 트	소 계	11	30	30	30	30	36	36	36
	1인승 요트	4	14	14	14	14	14	14	14
	윈드서핑	3	10	10	10	10	10	10	10
	2인승 요트	4	6	6	6	6	12	12	12
핀수영	소 계	2	24	24	24	24	24	24	24
	클럽대항전	1	8	8	8	8	8	8	8
	시도대항전	1	16	16	16	16	16	16	16
카 누	소 계	3	18	18	18	18	48	48	48
	바다카약 1인승	1	6	6	6	6	6	6	6
	인플레터블 2인승	1	6	6	6	6	12	12	12
	래프팅 5인승	1	6	6	6	6	30	30	30
철인3종	소 계	4	26	26	26	26	29	29	29
	팀릴레이	1	1	1	1	1	4	4	4
	학생부	1	4	4	4	4	4	4	4
	스프린트	1	6	6	6	6	6	6	6
	동호인부	1	15	15	15	15	15	15	15
바다수영	소 계	1	8	8	16	24	16	16	16
	개인전	1	8	8	16	24	16	16	16
드래곤보트	소 계	1	8	8	8	8	128	128	128
	초등부	1	2	2	2	2	32	32	32
	중등부		2	2	2	2	32	32	32
	고등부		2	2	2	2	32	32	32
	일반부		2	2	2	2	32	32	32
고무보트	소 계	1	8	8	8	8	112	112	112
	초등부	1	2	2	2	2	28	28	28
	중등부		2	2	2	2	28	28	28
	고등부		2	2	2	2	28	28	28
	일반부		2	2	2	2	28	28	28
카이트보딩	소 계	3	4	4	6	8	9	13	17
	다운슬라럼	3	1	1	2	3	2	2	2
	코스레이싱		3	3	3	3	3	3	3
	단체전		0	0	1	2	4	8	12
바다사랑 오행시	소 계	1	2	2	4	6	2	4	6
	초등부	1	1	1	2	3	1	2	3
	증·고등부		1	1	2	3	1	2	3
바다엽서 그리기	소 계	1	2	2	4	6	2	4	6
	초등부	1	1	1	2	3	1	2	3
	증·고등부		1	1	2	3	1	2	3

* 완주메달 2,100개(핀수영 700, 철인3종 700, 바다수영 700)